

● 제 5 회 대학교육정책포럼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 일시: 2000년 4월 26일(수) 13:30 ~ 17:00
- 장소: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원: 충남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일 정 표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식
	사 회 : 강경석(대교협 정책연구부장)
14:05~14:20	·축 사 : 윤형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충남대 총장)
14:20~14:50	·기조발제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이수오(창원대학교 총장)
14:50~15:20	·주제발표 1 : 지방대학의 실태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5:20~15:50	·주제발표 2 :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김성국(이화여대 교수)
15:50~16:00	·휴 식
16:00~17:0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박재목(충남대 기획연구실장), 오을임(조선대 정책대학원장), 최순돈(영남대 기획처장), 엄상현(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17:00	·폐 회

목 차

《 기조발제 》	1
I.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현황	3
II.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현황	5
III.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	10
IV.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14
V.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15
《 주제발표 1 》	91
I. 들어가는 글	21
II.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요인	23
III.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33
《 주제발표 2 》	73
I. 「위기의 지방대학」: 거시적 환경	39
II. 지방대학 교육여건의 현주소	41
III.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 대책」	46
I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현황	50
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문제점	52
VI.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54
VII. 맺음말	61
《 토론 I 》	36
《 토론 II 》	17
《 토론 III 》	97
《 토론 IV 》	78

○ 기 조 발 제 ○

I.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현황	3
II.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현황	5
III.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	10
IV.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14
V.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15

《 기 조 발 제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이 수 오
(창원대학교 총장)

I.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현황

- 옛말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음. 이 말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주변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표현임.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화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개발방식을 지향하였음. 그 결과 모든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산업,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분도 서울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199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400만명의 45%인 20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 또한 전국의 278만여 사업장 중에서 43.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1240여만명의 사업체 종사자중 48.2%인 600여만명이 수도권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1997년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수도권이 전체의 45.7%인 198조원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형편임. 특히 8개 도의 경우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50%에도 미치지 못함.
- 결론적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반면 다른 사회적 지표에서는 5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 수도권과 지방의 항목별 비교

항 목	수 도 권	지 방	계
인구수(1995년)	20,189,000명 (45.3%)	24,420,000명 (54.7%)	44,609,000명 (100.0%)
사업체수(1998년)	1,213,040개 (43.6%)	1,569,432개 (56.4%)	2,782,472개 (100.0%)
사업체종사자수 (1998년)	5,995,707명 48.2%	6,437,766명 51.8%	12,433,473 (100.0%)
지역내총생산(GRDP) (1997년)	197,567.4(10억원) (45.7%)	234,627.5(10억원) (54.3%)	432,194.9(10억원) (100.0%)

<표 5>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998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3.9	95.2	78.2	65.1	78.7	74.0	68.1	77.3	80.0	47.3	48.5	44.6	44.4	40.4	41.1	53.7	49.1

II.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현황

- <표 3>에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지역 학생(초·중·고·대학)수는 99년 현재 472만7천명으로 전국 학생수의 43.8%를 차지하는데, 수도권지역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대학생중 수도권지역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동안 증가하지 않다가, 99년에는 전년보다 8만4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총 증가된 대학생(19만3천명)의 43.5%가 수도권지역에서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편입학 확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표 6> 수도권지역학생수(1985~1999년)

(단위 : 천명,%)

	총 학생수			총 대학생수*		
	전국	수도권	비율	전국	수도권	비율
1985	11,141	4,006	36.0	1,178	519	44.1
1995	10,494	4,483	42.7	1,890	749	39.7
1996	10,535	4,528	43.0	2,056	809	39.3
1997	10,619	4,578	43.1	2,266	876	38.7
1998	10,704	4,647	43.4	2,480	960	38.7
1999	10,804	4,727	43.8	2,673	1,044	39.1

* 대학생 수는 전문대학생 수를 포함.

- 1999년도 교육대학을 제외한 전국 4년제 대학은 총 184개로 그중 38%인 70개가 수도권에, 62%인 114개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

- 일반대학의 경우 총 161개 대학이 있는데, 수도권에 41%인 66개, 지방에 59%인 95개 대학이 있으며, 재학생 159만명의 40%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음. 특히 2000학년도 수도권 대학의 대학입학정원이 전체의 34%임.
- 이 원인은 지난 십여년간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억제한 반면, 지방대학의 정원은 늘여주었기 때문이며, 대학 신설도 지방대학 위주로 하였기 때문임.

<표 7>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분포(1999년)

구분	일반대(161개교)			산업대(19개교)			각종 학교	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수도권	4	62	66 (41.0%)	2	1	3	1	70 (38.0%)
지 방	22	73	95 (59.0%)	6	10	16	3	114 (62.0%)
합 계	26	135	161 (100%)	8	11	19	4	184 (100%)

<표 8>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학생수(1999년)

구 분	재학생수	비율
수도권	630,846명	39.7%
지 방	956,821명	60.3%
합 계	1,587,667명	100.0%

- 반면에 고3 수험생의 42.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치보다 높은 45.2%의 학생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외형적인 비교수치만을 본다면 이론적으로 수도권 학생이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야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함.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62.46%임. 또한 1999학년도 서울소재 대학의 입학자 약 100,100명 중에서 지방고등학교 출신자는 48.8%인 49,250명임.

<표 9> 수도권과 지방대학 입학정원비율(2000년)

구 분	'99학년도 고3 학생수(A)	2000학년도 입학정원(B)	고3 대비입학정원 (B/A)
수도권	329,415명 (42.6%)	122,685명 (34.1%)	37.2%
지 방	443,707명 (57.4%)	236,965명 (65.9%)	53.4%
합 계	773,122명	359,650명	46.5%

<표 10> 지역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1999년)

구 분	수도권	지 방	합 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수	206,501명 (45.2%)	250,330명 (54.8%)	456,831명

<표 11> 수능성적 상위 5%학생 서울소재대학 진학현황(1999년)

계 열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	서울소재대학 진학자	비율
인 문 계	20,567명	14,113명	68.62%
자 연 계	16,832명	9,639명	57.27%
예·체능계	4,614명	2,489명	53.94%
합 계	42,013명	26,241명	62.46%

<표 12> 서울소재대학 입학자의 지방출신비율

구 분	합격자	지방고교출신자	비 율
1999년	100,886	49,253	48.8%

- 수도권 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료관련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안되어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강원도, 충청남·북도의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임.
- 후자의 경우 편입학 자율화 조치로 인하여 수도권대학에 편입하는 경향이 심각하여 지방대학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생의 절반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도 있음.
- 일반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선발율은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40% 이상임. 특히 수도권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편입이 50% 이상인 반면, 지방대학의 경우는 70%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편입임.
- 또한 수도권 대학 편입선발자 중 지방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이 됨으로써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표 13>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1999년)

구 분	모집인원(A)	미충원인원(B)	미충원율(B/A)
수도권	121,508명	734명 (7.4%)	0.60%
지 방	230,943명	9231명 (92.6%)	3.99%
합 계	352,451명	9965명	2.80%

<표 14>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일반편입생 선발현황

	1998년 2학기			1999년 1학기		
	모집인원	선발인원	선발율	모집인원	선발인원	선발율
수도권	13,353명	11,153명	83.5%	16,590명	15,680명	94.5%
지 방	29,152명	8,900명	30.5%	31,700명	19,729명	62.2%
계	42,505명	20,053명	47.2%	48,290명	35,409명	73.3%

<표 15> 수도권대학 일반편입대상자의 분포

	수도권대학편입인원			수도권대학출신자		지방대학출신자	
	총선발 인 원	일반대학 출 신 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8년 2학기	11,153명	5686명	51.0%	2,026명	35.5%	3,660명	64.4%
'99년 1학기	15,680명	8741명	55.7%	3,276명	37.5%	5,465명	62.5%

-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지방대학보다 5% 정도 높음. 하지만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함.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며, 각종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자의 90%가 수도권대학 출신임.

<표 16> 지역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구분	졸업자(A)	취업대상자수(B)	취업자(C)	취업률(C/B)
수도권	84,332명	68,984명	37,334명	54.1%
지방	120,058명	106,622명	52,813명	49.5%
합계	204,390명	175,606명	90,147명	51.3%

Ⅲ. 지방대학의 위기의 원인

-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몇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음.
 - 정부의 국가운영 정책에 따른 원인
 - 교육부 정책에 따른 원인
 -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의한 원인
 - 지방대학 스스로의 원인
 - 국민 마음가짐의 원인
- ▶ 정부의 국가운영 정책에 따른 원인
 - 우리나라의 경우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시행한 결과 대학교육은 물론 사회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심화되었음.

- 정부의 국토개발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첨단산업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음.
- 따라서 정부 각 부처 사이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투자의 효용성이 낮아지며, 지역 특성화 분야도 일부지역에서는 지속성이 결여되었음.
- 모든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 또한 지방에는 양질의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너무 빈약함.

<표 17> 주요 정부 추진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분야

	3차국토개발계획 (1992)	특성화공대 (1978, 교육부)	국책공과대학 (1994, 교육부)	BK21지역대학 (1999, 교육부)	테크노파크 (1997, 산자부)	지역산업육성 (1999, 산자부)
강원	산업, 관광, 교육			정보통신		
대전, 충남	행정, 과학, 첨단산업	공업교육	신소재	정보통신	정보통신, 의료	
충북	첨단기술산업 등 지공해내륙형공업		반도체, 정보	전기전자 및 컴퓨터		
대구	업무, 첨단기술, 패션산업	전자	전자	정보	전자기술	섬유산업
경북	지공해산업 한의연구단지		기계, 소재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생명	
부산	국제무역, 금융	기계	기계	기계산업 자동화정보통신		신발산업
울산, 경남	첨단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전북	기초소재형임해기간산업, 조립가공, 문화예술		자동차	전자정보		니트산업
광주, 전남	첨단산업, 예술, 문화	화공	자동차	수송기계	광관련기기,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	빛산업
제주	관광, 문화			신해양개발		

▶ **교육부 정책에 의한 원인**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 교육부에서조차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음.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학 설립 및 학과 증설을 허가하였음.
- 국가 전체의 인력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대학의 설립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교육부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feedback 시켜 정책에 재반영시키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정작 자율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학부제임.

【예】 학부제의 경우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창원대학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의 학생이 과별모집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모집단위를 광역화 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러나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생활해 본 결과 75%의 학생이 학과제가 자신에게 더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 문제는 대학원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수도권 일류대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나머지 대학 사이에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교육부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을 불모로 반대한다거나, 학생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하여 정책의 변화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의한 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해가 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면 이제까지의 자본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확보책으로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아울러 대학이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해야 할 것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갖 혜택을 주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대학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임. 요즈음도 각종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할 때, 투자해서는 안될 곳에 억지로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고 보는데, 대학 발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임.

▶ 지방대학 스스로의 원인

-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게 있음. 국립대학, 사립대학 공히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함.
-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와 교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스스로 자구적 노력을 등한시하였음.
- 대부분의 대학들이 양적 팽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분별한 학과의 신설, 입학정원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당초 설립계획과는 다르게 재단전입금의 지원없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한 대학 경영을 한 결과 투자재원의 한계로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 인식에 의한 원인**

- 국민이란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 인맥 중심의 사고가 가장 큰 원인임.
- 우선 지방대학 학생들 스스로의 패배의식이 주요한 원인임.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고, 쉽게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됨. 아무리 대학에서 좋은 제도를 제공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 학부모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음. 심하게 말하면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음.
- 특히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봄.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여 지방에 근무시키면 얼마 후에 직장을 옮긴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여전히 본사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음.
- 또한 선발기준을 지나치게 어학 위주로 하여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자초하고 있음.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요구하면서 인턴제도나 현장실습 요구에 대해서는 인색함.
- 이러한 이유들이 총체적으로 네가티브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지방대학의 위기가 도래하였음.

IV.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 국가경영 측면에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은 국가존립을 위한 절대절명적 과제임. 지방대학의 육성도 동일한 시각에서 보아야 함.

- 지역마다 고유한 사회문화가 존재하며, 이 것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일은 지방대학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임.
-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나라는 드물며, 만일 수도권에만 좋은 대학이 집중되게 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자식 1명을 서울의 사립대학에 유학 보낸다고 할 때 월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드는데 이 금액은 중산층에서조차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금액임. 이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자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

V.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의 관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 및 역할 분담, 재정지원의 형태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특히 종합국토개발계획,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반드시 교육과 연계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책이 지방의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을 정부에서 언제까지 보호·육성할 수는 없을 것임.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도입하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과 부실한 경영을 하는 대학과

는 엄격히 구분을 해야 할 것임. 다만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해 판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임. 대학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조직이 절대로 아님.

- 아울러 정부의 대학에 대한 획일적 통제보다는 대학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자구노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특히 이론적 혹은 이상적인 제도를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선불리 도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

-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라는 두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 우수학생의 유치
 -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
 - 교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대학원 육성
 - 졸업생의 취업강화
 -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 지역주민과의 연계체제 구축
- 우수학생의 유치
 - 우수학생의 유치는 교육프로그램, 교육인프라, 취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제시될 때 가능
 - 장학금 재원 확대

- 기숙사 시설 확보
-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이 부분은 지방의 대학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지역 산업,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특성화시킬 분야를 정립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임.
- 【예】** 이번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지역의 산업특성과 무관한 정보통신 분야를 택하여 선정이 되었음. 이 예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 대학이 특정부분을 특성화하여 졸업생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함.
- 이 부분에서는 지방대학 중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분담이 일부 필요(기초과학, 인문과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등).
- 양질의 교육을 위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
 - 이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 기숙사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원하는 학생이 모두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정부의 재원으로 구축하여 대학에 연결해야 함
 -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에 적극 협력해야 함. 아울러 각종 문화 공연 및 전시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대학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최소한의 대학원 육성
 - 교육과 연구를 분리할 수 없듯이 교육중심대학이나 연구중심대학이나

는 획일적인 잣대로 결정할 수 없음.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
계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부문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최소
한의 대학원 육성책도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
가 추진되어야 함.

- 교수가 최소한의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이 필요.

◦ 졸업생의 취업강화

- 아직도 대부분의 대기업이 본사 주도로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현지의 공장에 이양해야 함
- 지역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센티브 부여

◦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

- 외국 대학과의 학술교류는 『Give and Take』 관계가 기본임. 특히
선진국의 학자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정
도의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 수용에 필요한 별
도의 재정 지원을 지방대학에 해야 함
-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학당 등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이 필요. 하지만 현재의 교수인력으로는 강의하기도 벅찬 상황임.

◦ 지역주민과의 연계체제 구축

-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지방대학은 향후 존재할 수 없음.
- 지방대학의 당면과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수요를 해결해 주는 것임.
-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 주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스스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함.

-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과의 연계체제 구축

● 주 제 발 표 1 ●

I. 들어가는 글	21
II.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요인	23
III.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33

《 주제발표 1 》

비수도권 지방소재대학의 실태 및 육성방안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I. 들어가는 글

지방소재 대학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소위 1960년 말 농경 사회적 특성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된 이후 그리고 대학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대중고등교육사회로 전환된 이후부터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소재 대학의 위기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이 복합되어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8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지방소재 대학의 종합 육성시책 역시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교육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방소재 대학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어 왔고 경제원리에 입각한 재정지원의 차등화와 학생인구의 감소 등에 기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제 지방대 소외 현상과 지방대 콤플렉스 심지어는 ‘지방대 파산위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대학진학수요의 급격한 감소, 지방과 수도권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차이,

지방우수인재의 서울집중현상,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의 차별 그리고 대학에 산지원의 차등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과정적 소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팽배되어있는 ‘서울이외=지방’이라는 2분법적 차별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서울중심주의(Seoulism)에 따른 우열을 규정하는 차별화 개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도 이러한 2분법적 대학관이라 할 수 있고 학문분야의 편제에 있어서나 발전모형의 모색에 있어서도 다분히 수도권 지향적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격리된 대학발전모형의 모색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학생유치와 산학연 협동 등 제반 협력체계의 비 효율화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지방대학의 문제를 인식하고 수도권 내 대학신설과 학생증원억제 등의 수도권 유입억제 정책과 함께 지방국립대학중심의 발전모색과 수도권 지역 신설대학의 지방이전과 분교 설치 등 다양한 분산책을 강구해 왔지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중심의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인 지방대학간의 우열적 시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육성책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소재 대학의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요인

지방대학의 현실과 위기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바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의 수요 집중, 문화시설의 편중, 생산구조의 집중 그리고 교육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과 맞물려 수도권의 비대화와 함께 지방대학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지방대학의 현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하겠다.

1. 지방소재대학의 현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일반적 현황

1999년 통계청 분포에 의하면 1998년 서울 인구수는 전체 인구 47,173천명 중 10,321,496명을 차지해 전체의 21.9%로 인구집중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구나 수도권 인구수를 볼 때 1995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전체 인구의 45.3%인 20,189,000명으로 면적에 비해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인구밀도의 경우에도 서울은 17,046명으로 1km²당 473명의 전국 40배정도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의 1999년 한국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1997년 지역별 총 생산액의 비중면에서도 수도권이 45.7%이고, 그중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2.7%나 되며, 3차산업의 경우에는 90.1%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1999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사업체 중 수도권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2,472개중 43.6%인 1,213,040개에 총 종사자수 12,433,473명의 48.2%인 5,995,707명에 이른다.

또한 교육집중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1999년 3월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초등학교가 19.1%, 중학교 20.6%, 고등학교 22.3%, 대학교 25.8%, 석사과정이 47.0%, 박사과정의 49.9%를 차지해 고급인력양성의 집중이 심화되어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도권외의 총생산(GRPD)도 1997년의 경우 전체 432조 1,949억원중 수도권에 45.7%(197조 5,674억)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과 의료시설도 1998년 통계를 보면 전체의료기관의 30.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2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999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따라서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학생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방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입의 결과는 지방대학의 공동화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직·간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일반적 현황을 볼 때 교육인구자원의 측면은 더욱 심각한 지방대학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즉 1999년에 전국 초·중·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472만 7천명중 수도권지역학생이 절반에 육박하는 43.8%에 이르며,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지방대학의 규모와 학생수

(단위 : 천명, %)

	총학생수			총 대학생수*		
	전국	수도권	비율	전국	수도권	비율
1985	11,141	4,006	36.0	1,178	519	44.1
1995	10,494	4,483	42.7	1,890	749	39.7
1999	10,804	4,727	43.8	2,673	1,044	39.1

* 대학생 수는 전문대학생 수를 포함.

2) 지방소재 대학의 현실

2000년 4월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수는 192개 대학이 있는데 이중 36.4%인 70개 대학이 수도권에, 나머지 63.6%인 122개 대학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의 경우 161개교 중 수도권에 66개인 41%, 비수도권에 95개인 59%가 있으며, 재학생 1,587,667명 중 수도권에 39.7%가 재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지방대 입학정원 및 학생수 이동현황

수도권과 지방대학 입학정원과 미충원 인원을 보면 2000학년도 입학정원이 수도권 122,685명 34.1%, 지방 65.9%인 236,965명으로 1999년 고3 773,122명 대비 입학정원이 지방 53.4%, 수도권 37.2%로 나타나 있다.

<표 2> 지역별 미충원 인원 현황(1997~1999)

지역	학년도	모집인원	등록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률(%)
강 원	1999학년도	18,394	17,456	938	5.10
	1998학년도	16,954	16,383	571	3.37
	1997학년도	13,670	13,365	305	2.23
경 기 서 울 인 천	1999학년도	128,193	125,382	2,811	2.19
	1998학년도	120,331	119,562	769	0.61
	1997학년도	122,654	121,955	699	0.57
경 남 부 산 울 산	1999학년도	53,140	51,305	1,835	3.45
	1998학년도	48,412	47,987	425	0.88
	1997학년도	45,471	45,199	272	0.60

지역	학년도	모집인원	등록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률(%)
경 북 대 구	1999학년도	43,555	41,538	2,016	4.63
	1998학년도	35,978	38,897	1,081	2.70
	1997학년도	33,795	33,555	240	0.71
진 남 광 주	1999학년도	32,057	27,098	4,960	15.47
	1998학년도	29,914	26,190	3,724	12.44
	1997학년도	27,623	26,326	1,297	4.70
전 북	1999학년도	24,108	21,808	2,300	9.54
	1998학년도	22,295	20,659	1,636	7.33
	1997학년도	21,255	20,897	358	1.68
제 주	1999학년도	3,758	3,127	631	16.79
	1998학년도	3,261	2,963	298	9.14
	1997학년도	3,186	2,817	369	11.58
충 남 대 전	1999학년도	51,523	49,113	2,410	4.68
	1998학년도	46,441	45,413	1,028	2.21
	1997학년도	34,738	34,050	688	1.98
충 북	1999학년도	17,261	16,710	551	3.19
	1998학년도	15,862	15,655	207	1.31
	1997학년도	13,530	13,425	105	0.78
합 계	1999학년도	371,989	353,537	18,452	4.96
	1998학년도	343,448	333,709	9,739	2.84
	1997학년도	315,922	311,589	4,333	1.37

자료: 대교협(1999). 내부자료.

<표 3> 편입자 및 전출자 현황

구 분	편 입 자			전 출 자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지 역 별	서 울	7,561	10,944	14,779	6,058	393	278
	부 산	2,980	2,301	4,380	4	1	127
	대 구	410	648	758	-	1	-
	인 천	718	694	2,131	-	-	-
	광 주	410	1,016	1,012	-	1,291	1,193
	대 전	1,334	1,722	2,847	3	232	302
	울 산		184	414		-	-
	경 기	5,457	7,449	8,920	129	245	453
	강 원	893	1,243	1,175	-	-	2
	충 북	1,256	1,754	1,876	191	240	86
	충 남	2,147	3,219	3,409	70	295	13
	전 북	1,137	2,331	1,911	156	342	510
	전 남	1,138	1,222	1,219	-	80	161
	경 북	1,949	3,088	4,354	50	28	-
	경 남	421	1,203	832	-	3	-
	제 주	108	108	191	-	-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1997~1999.

<표 4> 지역별 재학생 수 및 휴학생 수(1997~1999)

지역	1997				1998				1999			
	합계	재학생수	휴학생수	휴학률	합계	재학생수	휴학생수	휴학률	합계	재학생수	휴학생수	휴학률
서울	345,481	264,923	80,558	23.3	381,331	286,838	94,493	24.8	408,911	295,472	113,439	27.7
부산	135,924	99,032	36,892	27.1	143,897	102,611	41,286	28.7	152,125	105,214	46,911	30.8
대구	51,307	38,657	12,650	24.7	53,165	39,259	13,906	26.2	56,741	40,019	16,722	29.5
인천	31,346	21,188	10,158	32.4	32,608	21,554	11,054	33.9	34,562	21,886	12,676	36.7
광주	59,741	44,633	15,108	25.3	62,216	45,239	16,977	27.3	65,874	46,733	19,141	29.1
대전	67,027	48,440	18,587	27.7	71,578	51,053	20,525	28.7	76,006	52,829	23,177	30.5
울산	-	-	-	-	16,609	10,702	5,907	35.6	17,573	10,876	6,697	38.1
경기	167,511	120,523	46,988	28.1	172,288	122,245	50,043	29.0	187,373	127,905	59,468	31.7
강원	60,406	43,444	16,962	28.1	65,200	46,827	18,373	28.2	69,093	48,078	21,015	30.4
충북	61,742	43,709	18,033	29.2	66,810	46,659	20,151	30.2	70,448	47,475	22,973	32.6
충남	84,062	60,328	23,734	28.2	97,558	68,697	28,861	29.6	110,119	75,095	35,024	31.8
전북	85,552	62,737	22,815	26.7	89,600	63,192	26,408	29.5	93,857	64,613	29,244	31.2
전남	34,661	26,017	8,644	24.9	39,248	28,126	11,122	28.3	42,669	29,313	13,356	31.3
경북	100,830	75,544	25,286	25.1	113,520	81,173	32,347	28.5	126,579	86,081	40,498	32.0
경남	71,157	49,503	21,654	30.4	59,366	45,006	14,360	24.2	62,088	42,142	19,946	32.1
제주	11,714	8,335	3,379	28.8	12,721	9,063	3,658	28.8	13,649	9,520	4,129	30.3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1999.

앞서 제시된 통계를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미충원율이 낮은 편이고 수도권 이외일지라도 대도시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의 미충원율이 낮다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97학년도부터 1999학년도까지의 3년 전체 미충원율을 볼 때 1.37%에서 매년 근 두배씩 미충원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학생수의 감소추세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학생수의 감소추세와 비수도권 대학들의 미충원율의 증가는 지방소재 대학들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편입과 관련된 <표 3>의 경우도 서울의 편입자 수는 1997년 756명에서 1999년 14,779명으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출자의 경우도 1997년 6,058명에서 1999년 278명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편입자의 수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서울과 비교적 인접한 경기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 수도권 진입현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나타낸 <표 4>의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들의 휴학생 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편입자보다 전출자가 많고 휴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아 미충원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지방소재 대학의 입학경쟁률과 우수학생 현황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들의 입학경쟁률과 우수학생 유치 현황을 살펴보는 일은 곧 지방대학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대학원 교육의 강화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 5> 지역별 입학경쟁률(1997~1999)

지역	1997			1998			1999		
	지원자수	입학자수	경쟁률	지원자수	입학자수	경쟁률	지원자수	입학자수	경쟁률
서울	332,494	73,704	4.5	395,784	77,013	5.1	395,172	77,659	5.1
부산	105,781	27,340	3.9	132,389	30,050	4.4	127,978	29,505	4.3
대구	45,136	10,047	4.5	32,600	10,665	3.1	32,860	10,892	3.0
인천	23,808	5,682	4.2	32,161	5,942	5.4	23,325	5,958	3.9
광주	44,592	12,155	3.7	32,356	12,423	2.6	42,398	13,026	3.3
대전	49,080	13,940	3.5	49,619	15,058	3.3	62,432	15,393	4.1
울산				6,490	3,059	2.1	9,222	3,045	3.0
경기	188,609	37,340	5.1	204,333	36,097	5.7	273,349	36,501	7.5
강원	45,028	12,797	3.5	59,636	14,625	4.1	56,137	15,094	3.7
충북	45,868	13,782	3.3	55,526	13,954	4.0	59,017	14,428	4.1
충남	147,994	20,673	7.2	114,801	24,029	4.8	124,397	26,175	4.8
전북	62,597	18,771	3.3	59,351	18,779	3.2	66,375	19,017	3.5
전남	30,541	8,784	3.5	35,357	9,405	3.8	34,606	10,974	3.2
경북	109,837	24,030	4.6	113,892	26,391	4.3	113,492	27,021	4.2
경남	47,040	14,213	3.3	43,742	11,884	3.7	44,704	11,722	3.8
제주	4,666	2,481	1.9	5,656	2,919	1.9	6,177	2,868	2.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1997~1999.

<표 6>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지방대학 진학 현황(1999)

계열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	지방대학 진학자	비율
인 문 계	20,567명	6,454명	31.38%
자 연 계	16,832명	7,193명	42.73%
예·체능계	4,614명	2,125명	46.06%
합 계	42,013명	15,772명	37.54%

지역별 입학경쟁률을 보면 서울의 경우 1997년 4.5:1의 경쟁률에서 1995년 5.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경기의 경우도 5.1:1에서 7.5:1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은 경쟁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원 성향보다는 불안정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6>에 제시된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진학현황을 볼 때 인문계의 31.38%, 자연계의 42.73%, 예체능계의 46.06%로서 전체 42,013명의 37.54%인 15,772명만이 지방소재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1999년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의 합격자 100,886명중 지방고교 출신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8%로서 49,25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입학경쟁률에 있어서나 서울진학 학생수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62.46%가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의 확보면에서도 지방대학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수도권에 근접한 강원, 충청북의 지방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수도권 학생들도 성적이 부족하여 수도권 진학이 어렵거나 의학계통 등에 진학하려는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도 편입학이나 재수, 휴학 등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③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

취업률의 경우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도권 대졸자가 54.1%의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대 졸업자의 경우는 4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 출신자가 절대다수인 84.4%이고 지방대학 출신자는 겨우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률의 경우도 1996년의 경우 전국 인구 대비 25%인 서울 출신이 13%를 차지하고 서울소재 출신대학이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고시의 경우 1998년 182명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대학 합격자가 169명으로서 92.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률이나 국가고시 합격률 그리고 대기업 진출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들의 진출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지금껏 8가지의 지표상으로 나타난 지방소재 대학의 현실을 살펴보았듯이 1999년도 통계치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면

- ㉠ 수능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의 38% 정도만이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 ㉡ 서울소재 대학입학자 중 지방고교 출신자가 48.8%에 이르고 있다.
- ㉢ 미충원 인원 9,965명중 92.6%인 9,231명이 지방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 ㉣ 전체 졸업자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15~25%만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 ㉤ 행정고시 합격자 중 7.1%만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등이 지방대학의 현실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우수 인재의 유출과 공동화 현상 그리고 소외감 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소재 대학의 위기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들을 보면

- ㉦ 지방대 난립에 의한 학생 부족에 따른 지방대 위기 요인의 증가(1999년 현재 4년제와 전문대 총 입학정원은 65만 3,825명으로 전국 고3 학생수 77만 3천 122명의 84.6% 육박)
- ㉧ 교육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위기요인(지역특성화 정책의 부족과 수도권

과의 차별화 심화, 대학 설립 정책의 비현실성 등)

- h) 교육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국민의 지방대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위기 요인
- i) 취업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위기 요인
- j) 대학간의 과당경쟁과 백화점식 학과 증설에 의한 비특성화 구조적 요인
- k)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인식이나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되어 있다 하겠다.

Ⅲ.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는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개선에 앞서 인식과 정책적 요인의 개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지방대학’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재검토하여 수도권지역대학, 비수도권지역 대학으로 지칭한다든지 ○○지역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방대학의 전통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는 종합적 시각에서 실현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들을 보면

첫째,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친화적 인적자원개발, 산학연 연계모델구축, 지역사회중심 우수지역인력 배출, 지역사회 대학발전전략모형 등 지방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구체적 방안들은

- ① 교육연구여건개선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형 모델개발(인근지역간 연구벨트, 권역간 진학벨트, 공동교육축 구축 등)

- ② 지방대학재정기금제 도입(지역산업과 사회문화 경제적 특성에 걸맞은 지방대학연대 기금제 도입)
- ③ 지방대학특성화 정책 수립(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정책수립과 지방대학 특화년제 등 도입)
- ④ 학생유치전략구축(지방대학타운구축과 연계한 기숙사확충, 지역장학금과 우수학생 유치전략수립)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지방대학의 수도권대학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화의 촉진책을 강구해야 한다.

21세기는 국내대학간의 서열과괴, 기존의 고정관념과괴 그리고 세계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회의 세기」이다. 따라서 권역별 국제화 포럼이나 국제화 연합대학체제구축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로 우수학생유인체제와 함께 학생유치를 위한 서비스체제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출신 고교진학자에 대한 학비감면과 장학금지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출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또한 권역별 공동모집과 편입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교양강좌 등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획기적인 구조개혁과 발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간 교류, 국공립과 사립간의 역할분담, 국내외 협력체제에 의한 평생교육체제의 정립 그리고 산업체 육성을 통한 지방인재육성책 등을 종합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

다섯째, 지방소재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대 육성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대학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의 연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과 지방군간의 학사운영, 교수운영 등 협력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수교류제 / 순회교수제 활성화

지방소재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명도가 높은 석좌교수중심으로 「순회교수풀제」를 도입해 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순회강의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소재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교수교류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는 탈지역적 연대라 볼 수 있다.

2. 공동 학사운영체제 도입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학생을 공동으로 모집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등 전략적 제휴방법도 있을 수 있고 4년중 한 학기 또는 1년정도 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강좌운영과 교수관리, 학위수여 등에 있어서 비수도권대학의 학생이탈, 특정 수도권대학추종의 관습을 탈피할 수 있다.

3. 지역산업체 대학진흥기금 의무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체로 하여금 지역소재 대학에 최우선적으로 연구기금, 산학협동 프로그램, 기여기금 등을 출연하도록 하고 매출규모에 따

라 일정액의 「대학진흥기금」을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소재 유관산업체가 많은 지방소재 대학 전공영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체도 일정부분의 기여를 하도록 한다.

4. 가상대학 등 Cyber컨소시움 형성

지역의 한계성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인 가상대학을 통한 지방대학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Cyber 컨소시움 형성을 통해 지방소재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5. 국가차원 재정지원체제의 개혁

대학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경제원리나 경쟁위주 지원체제에서 탈피해 학생 인구 비례 내지는 특성화 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국대학을 국책형, 수익형, 전략형 등으로 기능 분화하여 재정배분 원칙을 재 수립해야한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10조정도의 지방대학 육성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한다.

6. 지방소재대학 인식전환 구조정립

비수도권 지방소재 대학의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구조적 개혁과 함께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지칭하는 관습부터 탈피해야하고 언론과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이러할 때 특성화된 「지역형 대학」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주 제 발 표 2 ●

I. 「위기의 지방대학」: 거시적 환경	39
II. 지방대학 교육여건의 현주소	41
III.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 대책」	46
I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현황	50
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문제점	52
VI.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54
VII. 맺음말	61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연구여건 개선 방안

김 성 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 「위기의 지방대학」: 거시적 환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중앙정부에서 모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방행정단위는 이미 수립된 국가경영전략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하부기관의 역할만을 담당해온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45.1%, 사업체수의 55.1%, 금융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중앙집중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왜곡된 경제현상을 초래했다. 그런데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한 폐해는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심력가설(Centripetal Thesis)을 주장한 지역경제학자 스캐틀(Schaetzl)은 “불완전경쟁하의 지방경제는 시장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며 만약 지방문제를 자유경쟁의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국가경제력은 구심력작용에 의해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 이라고 설파하였다(노순규, 1997).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 발전구조를 가져온 우리나라가 구심력가설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고부가가치형 서비스는 물론이고 첨단제조업 등 신규산업 대부분과 핵심적인 사회간접시설을 거의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은 경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지역발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이러한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인재들의 유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 위기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타 지방 유출은 그만큼 지방 재정의 타지역 유출을 의미한다. 지방학생이 서울지역에 유학할 경우 1인당 1년 교육비를 어림잡아 2천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2,000\text{만원} \times 9\text{명(매년)} \times 4\text{년} = 7,200\text{억원}$, 즉 지방에서는 매년 타 지역으로 7,200억원이 유출되어 지역 경제의 점진적 악화를 초래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대학입시에서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62.5%가 서울 소재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1999년 수도권 고3년 재학생의 비중이 42.6%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성적우수자의 80% 가량이 수도권으로 진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학진학의 수도권 집중이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도미노의 출발점이 되어 중국에 가서는 지방 중하위권 대학의 미충원을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9년 대학입시에서 서울소재 대학 입학자의 48.8%가 지방고교 출신(연간 약 50,000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998년 2학기 및 1999년 1학기 수도권 대학 편입생 중 각각 64.4% 및 62.5%가 지방대 재학생(연간 약 9,000여명)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대입 전형방식이 특별전형을 위주로 대폭 다양해지는 오는 2002학년도 입시에 불안을 느낀 지방거주 고교생들이 올 신학기 들어 서울 전학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 특기·적성이 중요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비 수험생들이 각종 입시정보와 학원, 주요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취업률은 지방대학이 49.5%로 수도권 대학의 54.1%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삼성전자, SK등 대기업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의 비율이 각각 22.1%, 15.9%에 불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13.3%에 불과하여, 소위 인기 있는 직장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다시 우수 학생의 서울 진학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지방 우수대학의 존립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II. 지방대학 교육여건의 현주소

1. 학생충원의 어려움

우선, 지방대학은 학생충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9년 현재 대학 미충원 인원 총 9,965명 중 9,231명이 지방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대 평균 미충원율은 4%이며, 여기에 편입으로 유출되는 인원 9,000명까지 고려하면 미충원율은 8%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진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교졸업생의 수가 대학입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2003년 이후에는 미충원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존립이 어려운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과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는 2003년에는 고졸예정자가 64만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은 72만6천여명으로 늘어나 적지 않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교육부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7년 교육부가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학설립준칙제도」를 만들어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한 1996년 이후 지방대의 난립을 조장

하였다. 실제로 1996년 이후 4년제 대학 27개대, 전문대 12개대가 각각 설립됐다. 최근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이러한 마구잡이식 대학 설립 방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80년대 이후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수도권에 생겨나면서, 지방대학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기도 소재 21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은 신학대학에서 ‘슬며시’ 종합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인구의 수도권집중에 결과적으로 일조를 한 셈이 되었다.

<표 1> 1999년도 시도별 4년제 대학 신입생 미충원율

지역	모집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강원	17,643	643	3.64
경기	35,245	195	0.55
경남	16,579	201	1.21
경북	36,343	1,428	3.92
광주	11,868	412	3.47
대전	14,143	353	2.49
부산	30,575	168	0.54
서울	79,891	498	0.62
울산	3,037	75	2.46
인천	6,327	41	0.64
전남	17,843	2,902	16.26
전북	23,093	1,797	7.78
제주	3,424	380	11.00
충남	34,451	556	1.61
충북	16,645	382	2.29
대구	5,299	-66	

자료: 교육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1999년 현재 경북, 충남·북 등 전국 8개 시·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이 지역내 고교 3학년 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아 '지방대 난립'이 '지방대 위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조). 특히, 2003년을 고비로 대학 및 전문대 입학 총 정원이 고 3 학생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2> 시·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교육기회

지역	고3 학생수	고3 대비 4년제 대학 입학정원(%)	고 3대비 전체대학 입학정원(%)
서울	176,697	50.1	61.4
부산	71,354	45.8	82.0
대구	45,405	22.4	65.4
인천	37,764	17.0	47.1
광주	25,860	67.1	118.9
대전	24,625	80.5	131.6
울산	16,411	18.3	34.0
경기	114,954	24.2	82.4
강원	26,113	69.2	112.9
충북	24,195	70.1	115.0
충남	31,882	95.4	135.5
전북	35,593	63.6	103.6
전남	37,424	35.3	79.2
경북	46,568	67.9	138.6
경남	49,303	36.4	71.0
제주	8,974	35.2	102.9
총계	773,122	46.5	84.6

특히, 두뇌한국(BK)21 사업 시행 이후 지방거점대학교 학부 졸업생의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나아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지역에 변변한 연구기관이나 이들을 흡수할 만한 기업체가 없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연구중심 대학, 지방=취업 및 교육 중심 대학」의 양분 구도로 추진된 두뇌한국(BK)21 사업은 대학원수준에서 지방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지방 대학이 학부중심 대학으로 갈지 여부는 대학이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지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왜 강제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2. 일부 지방사립대학교 생존의 위협

고등교육 취학인구의 점차적 감소와 지역 인구감소, 노령화, 외국 명문대학의 국내진출 등 지방대학에 불리한 환경변화가 가속화 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 전문대와 사립 대학,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 및 도립 전문대들은 2003년 이후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속은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학과의 폐과가 불가피하며,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육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대학교수 실업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대학원 지원 감소로 인한 대학 연구력 퇴보는 곧바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교수 취업률 저조, 대학원 진학 유인가 하락, 해당 교수 연구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기회 상실 또는 고등교육비 부담 증가 초래하여 폐교 시설 재활용 문제 발생함은 물론, 고급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발전 침체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난

지방대학은 우수학생 유치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학생을 확보하여 4년간 잘 가르쳤다고 해도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30대 대기업의 입사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학교 추천을 받아 어렵사리 원서를 구해 지원했지만 ‘지방대생’이란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녔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탈해 하는 지방학생들이 많다.

교수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방대학 교수들은 졸업시즌이 되면 종일 제자 취직일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매일 전화통을 붙잡고 친분이거나 연이 있는 회사마다 통사정을 하지만 취업은 쉽지가 않다. 지방대학의 취직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집중된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로 변해버린 지 오래다.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고, 대기업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을 우선시했다.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건 자연스런 귀결이다(조선일보, 1999.11.10; 11.12).

4. 지방대 구성원의 손상된 자존심

지방대 학생들은 단지 학교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대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 학생 스스로 학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고 장래 비전이 없으니 무작정 서울 변두리라도 가려고 애쓰는 심리가 확산되어 있다. 실력을 키우면 된다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좌절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나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두뇌한국(BK)21 사업이후 지방대 구성원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은 물론, 인재 유출이 가속화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BK21 사업이 서울의 연구중심 대학은 1류, 지방 국립대를 비롯한 지역 우수대학은 2류, 기타 지역대학들은 3류

로 고착시켰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지방 사립대 구성원들에게 높은 실정이다. 지방대학에는 서울의 우수한 대학의 교수 못지 않은 연구를 하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많다고 자부했는데 BK21은 이들 대학의 성장 잠재력을 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방대학 구성원들은 강력 비판하고 있다.

Ⅲ.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 대책」

교육부가 지난 1999년 3월에 펴낸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는 지역 우수대학 육성책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 지역우수대학의 교육·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사과정 교육을 실용교육 중심으로 내실화 함으로써 우수 인재가 지역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학사과정은 주거지 인근 대학에서 수학하고, 석·박사과정은 전국단위의 특성화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교육 진로모형 정립
- 지역·산업권역별로 교육훈련, 연구개발은 물론 지역 비교 우위 산업의 고도화와 벤처창업 육성의 메카로서 특성화된 공과대학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학 협동 교육 강화

○ 지역 우수대학 진학 유도

현재 「서울, 수도권 진학모형」을 「지역별 인근소재 대학 진학 모형」으로 전환: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거점대학에 진학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우수 교수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학교원 임용·승진방식 개선, 대학교육·연구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자도서관 및 지역단위 전문학술정보센터 구축 등 전국단위 학술정보 제공

○ 실용교육 강화

지역 우수대학의 학사과정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인터넷 등 정보처리분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 2003년까지 Lab실 등 외국어 교육시설, 정보처리 교육시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투자

○ 산·학 협동 교육 강화

고급 기술인력의 80%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 소재 대학을 지역 산업과 연계, 특성화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원활한 인력양성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의 「컨소시엄」구성을 전제로 지역별 공과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 지역 공과대학의 특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비교우위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육성 등으로 확산
- 과학기술부의 RRC사업, 산업자원부의 Techno Park 사업, 정보통신부의 Multimedia Polis사업 등과 연계 추진

이공계 국·공립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획기적 감축

- 국·공립대학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행 평균 35명 수준에서 2003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감축

“학사과정은 주거지 인근 대학에서 수학하고, 석·박사과정은 전국 단위의 특성화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진로모형”은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현실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에 형성된 지방대의 연구기반이 붕괴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수도권으로의 학생유출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지역 우수대학 진학유도, 실용교육 강화, 산·학 협동 교육 강화에 있어서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 3월 1일 지방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학생부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시행안을 확정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선발, 졸업 후 6급(대학원졸) 또는 7급(대졸)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후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지방대학간에 2학년 편입학을 다시 허용하고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감면,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서울-수도권 중심 진학모형’을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 진학모형’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 육성대책’은 사실상 ‘실기(失機)’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대학신입생이 모집인원에 못 미칠 2003년쯤이면 상당수의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육성책’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소생을 위한 응급처방이 될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세계일보 2000.3.3). 예를 들면, 지방대가 지역출신 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지자체가 대학원출신은 6급, 대학출신은 7급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공무원 임용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지금까지 임용고시를 거쳐 채용해 왔는데 지방대출신이라고 특채를 할 경우 임용원칙의

과기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역대학 출신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구나 시·도 지역에만도 지방대가 한 둘이 아닌데 이들 사이의 형평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또 6, 7급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위헌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지방직 7급 및 6급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직 5급, 사법시험 등까지 확대하여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기업체가 지방대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물론, 기업이 기업적 이해타산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지방대 졸업자를 우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이 사는 길은 오직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여 기업에 역지로 경쟁력이 뒤지는 인력을 지역인재라는 이유만으로 떠안김으로써 기업경쟁력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999년에 조사대상 47개국 중 38위였으며, 그중 인적자원(people)부문은 31위에 그쳤다.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47개국 가운데 47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59개국 중 22위이며, 그중 인력(labor)부문은 26위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대학 육성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을 교육, 배출하는 지방대학으로 육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지방대생에

게 공정경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대학이 자구적 노력의 틀 안에서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거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담은 수 십개의 학과를 선단경영식으로 개설,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특색 있는 지역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시장의 논리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전국 단위의 대학서열화의 희생양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시정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계속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제1차년도(1997.11~1998.6)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지난해 10월29일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1차년도인 1997년도에 28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였다(김효겸, 1998).

2차년도인 1998년도에는 1차년도에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제고하고, 대학간·교수간 선의의 경쟁 풍토를 조성하며,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특성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의 점검 및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는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세수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

여 부득이 1997년도에는 180억원, 1998년도 예산은 15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1차년도에는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 공학, 기초과학 및 자유응모 분야 등에 총 28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인 1998년도에는 지방대학 특성화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지원대학수와 동일하게 지원키로 하였으며, 3차년도인 1999년도에는 장래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14개 대학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 및 ‘분발추구’를 받은 대학은 감액, ‘우수’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하여는 지원분야별로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고, 타 사업지원(특수목적 지원사업) 대학은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원토록 하였다(김효겸, 1999).

<표 3>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계 획	200	200	200	200	200	1,000
실 적	180	150	150	-	-	480

자료: 김효겸(1999), 89쪽.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1차년도(1997. 11~1998. 6)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교육부가 지원분야별로 지원대학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97 및 '98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지원대학수, 금액(97/98)	우수대학 사례
국제전문 실무인력 분야	6개교, 36/30억원	부산외대는 국제지역전문가(Globalized Expert) 양성 사업을 위해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 및 언어와 통상분야 등 대학전체의 협동 프로그램 성격으로 학부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공학 분야	8개교, 72/60억원	목원대는 건축·도시분야의 특성화교육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최신 실험실습기자재와 최첨단 시청각교육 매체 구입 및 디자인스쿨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기초과학 분야	5개교, 27/22.5억원	부경대는 해양식량자원개발 특성화를 위해 공동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특성화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자유응모 분야 (인문부문)	4개교, 21.16/17.6억원	공주대학교는 에듀테마파크(Education Theme Park)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정보대학원을 설립, 학교교육 현장의 정보화를 이끌어 갈 선도자 양성 및 중등학교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연구·개발
자유응모 분야 (기타부문)	5개교, 23.84/19.9억원	경성대학교는 멀티미디어 특성화를 위해 실무·실습 중심의 교육모형 구축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활용

자료: 김효겸(1999), 89-90쪽.

V.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문제점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과 밀착된 특정분야를 선정,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대학 특성화의 목표이다. 과연 지방대학의 특성화가 지방대학의 발전

에 기여할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는 공학, 기초과학, 국제전문인력 등으로서(물론, 자유응모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 대학에 유리한 점이 많다. 실제로 '97 및 '98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대도시소재 대학들로서 현재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非대도시권(농어촌)지역 사립대학들에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비대도시권(농어촌) 사립대학은 44개로서 전체사립대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어촌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부의 지원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대학이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는 교육 및 수업, 연구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시지역의 우수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설립준칙주의에 의거 교육부가 설립인가를 한 후에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소규모 농어촌 대학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성화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대학의 추진방향과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특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분야별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의 사례를 분석하면 부경대학교의 해양식량자원개발 특성화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백화점식' 대학운영을 지양하겠다고 도입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지역산업체나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 학·연·산 협동체제 구축이 지역의 한계 때문에 명실상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I.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1. 4개 광역권 개발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1년까지 총 74조여원이 투입돼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등 4개 광역권을 개발하게 된다. 이 개발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북 경산시, 강원 양양군 등지에 인구 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개 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구미, 포항, 군산, 장항 등에 총 3,933만평의 새 공장용지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을 199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광양만·진주권은 광양을 축으로 한 국제물류 거점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연구기능, 여수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벨트로 육성된다. 대구·포항권의 경우 달성·경산·성주지역 등에 자족형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구 성서 3단지, 포항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다(경향신문 1999.12.9).

군산·장항권에는 군·장지역을 연결하는 쌍둥이 국제교류·업무도시를 육성하고 인구 35만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8곳이 조성된다. 또 강원·동해안권에는 총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9곳이 개발되는 한편 영동·동해·동서고속도로가 신·증설되고 동해선·영동선의 복선 전철화가 추진된다. 2011년까지 전국 광역권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인구의 46%, 공장의 55%를 안고 있는 수도권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방대학의 신설의 경우 대학설립 요건은 해당 지방광역권의 지역 및 산업발전에 맞는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소규모 대학 설립을 유도하고, 일반 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특성화의 근본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존 지방대학도 지방광역권 소요 인력양성

및 재훈련을 위한 역할을 분담 특화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인근 지방대학간 전공학과 조정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학간 구조조정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있는 지역'에 자본이 투자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역 발전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단 조성이나 기계 설비 등 물적 투자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투자로 인식하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지식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투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지방대학의 정원자율화 재고와 지방대학 균형 육성

교육부는 지방사립대의 정원을 2001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무분별한 정원자율화는 오히려 대규모 지방대학에 비해 열세인 소규모 지방사립대학의 공동화를 촉진하게 될 우려가 있다. 2003년부터 대학 취학인구가 대학입학정원을 밀들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및 5대 도시의 대학 정원은 오히려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농어촌 대학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내실화하는 길이 된다.

아무런 사전대책 없이 정원자율화 정책을 계획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소규모 비대도시권 지방대학들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붕괴현상은 전남에서부터 시작되어 전북, 제주, 경북, 강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경남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표 1 참조).

특히, 농어촌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과 패턴을 달리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소규모 지방 사립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벤처창업 지원 등 산·학 협동 강화

지방대학을 벤처창업 육성의 메카로 삼는다는 계획은 이미 1999년 3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 들어 있다. 최근 서울의 테헤란밸리, 양재밸리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벤처의 열풍은 거품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앞장서서 벤처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서대는 일찌감치 벤처분야를 특성화 중목으로 정해 각광을 받고 있다. 호서대 벤처기술·벤처경영은 두뇌한국(BK)21 사업 특화분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년 전부터 산학협동 및 벤처 관련 교수진만 17명을 확보했고, 벤처대학원 전용건물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 시설을 추진중이다. 벤처산업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위해 지난 98년 학장, 학과장 제도 폐지, 학부제 전환, 벤처학부 신설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대학 벤처학부에서는 천안 지역 4,000여개 중소기업을 포함, 전국적인 벤처기업 인력을 양성해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이 대학에 거금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산·학 협동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차별이 희석되고 중심부(metropolis)와 주변부(periphery)간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 기업의 입지(location)도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을 고집하지도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원격근무(teleworking), 원격교육(tele-education)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있어서 인적자원(human resource)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대학의 핵심 인력을 얻기 위해 대학에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벤처기업 및 대기업들은 단순한 장학금보다는 투자형태로 수십억원을 제시하기

도 한다. 창업지원, 기술개발 등 부대조건을 달거나 유능한 인재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탁해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대학의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실속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0.4.3).

최근 코스닥(KOSDAQ)에 상장되어 단시일 내에 거금을 벌어들이게 된 벤처 사업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지방대학을 위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이라는 벽을 첨단 벤처사업이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지방대학은 진정한 특성화 사업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지방대학이 얼마나 빨리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이다. 지방화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성대학은 1997년 사회과학-공학-예술 3개 계열을 해체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단과대학인 멀티미디어대학을 국내 처음으로 출범시켰다. 멀티미디어 대학은 커뮤니케이션학부, 컴퓨터과학부, 영상사진공연학부, 디자인학부로 구성돼 있다. 멀티미디어 프로덕션을 자체적으로 설립, 학생들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결과 평균 40점 가량 점수가 향상될 정도로 우수학생이 몰려들었다. 현실적인 여건상 경성대학은 소위 일류 대학을 지향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대학이 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멀티미디어 특성화를 시작한 것도 이런 취지이다. 똑같은 커리큘럼의 똑같은 학과가 전국에 100개씩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다른 대학이 하지 않는 틈새를 개발하자는 「세계 유일(World Only)」 차별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적중하였고, 경성대학은 특성화 사업덕분에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4. 지방대학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방대가 살아남는 길은 국내의 중앙만을 쳐다보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려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해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면 결국 지방도 살고, 세계화도 달성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글로벌(globalization)과 지방(local)을 합친 ‘세방화(世方化)’, 즉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이라 부른다. 지방대가 수도권대학보다 더 국제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해외인턴십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북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북대는 얼마 전부터 학생들의 해외인턴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인터뷰 시험에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인터뷰 전문 외국인까지 채용하여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인턴십의 목적은 학생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실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로 삼는 지역은 세계적인 정보기술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이다. 앞으로 경북대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합작연구소도 곧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대학이 학제와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국제화에 앞장 설 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국제전문 실무인력 양성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지방대학간 「대학연합체」 결성 지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와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우선, 지방대학들간

협력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에 따라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을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합대학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일리노이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Illinois System), 위스콘신 대학교 시스템(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과 같이 연합대학 총장이 연합대학 학사평의회(university board)와 협의 하에 각 지역 캠퍼스를 관할하여 교육, 연구, 학·연·산 협동,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강한 결속력), 일본 도쿄의 5개 대학(히토쓰바시대학, 도쿄공업대학, 도쿄외국어대학, 도쿄 의치과대학, 도쿄 예술대학) 연합체제 구축사례와 같이 교양과정 공동운영, 편입학 상호허용, 일부 첨단분야 공동연구와 같이 형식(느슨한 결속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면 기능의 분담, 대학간 학과, 학부의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고 일정시간이 지나 본 제도에 오르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 예산 편성 및 배분의 통합
- 교수 및 직원 인사의 통합관리
-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 정원조정
-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협력
- 학위수여 업무의 통합
- 협력 연구체제 구축
- 입시제도의 통합운영
- 대학부설 연구소의 통·폐합

물론, 연합대학 체제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에 시행되려면 관계법령의 정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문제가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6. 인기 전문대학원의 지방설치

1999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5%내에 들어가는 우수학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이 인문사회계에서 월등히 높은 68.6%였으나, 자연계의 경우, 그 비율이 5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대체적으로 지역의 인구비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계 우수학생의 경우 인기학과인 의·치학 계열로 집중하는 데, 정원이 인구비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낮아지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인 수요가 폭발하는 한의학과나 한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문전성시로 몰리는 현상을 우리는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계 인기 전공분야인 전문대학원들이 속속 도입되고, 설치인가를 지역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내준다면, 우수인재의 지방유치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우수인재의 지방유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우수인재가 몰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방대학이 줄 수 있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물론이고, 만약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되고 설치원칙에 있어서도 “지역인구비례”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권역별로 지방대학에 인기 전문대학원이 속속 신설되어 전국의 우수인재지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방의 우수학생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진국형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구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될 것이다.

7. 주요 권역별 대학단지 개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민간자본으로 대학단지 또는 대학촌(Campus Town) 형성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환경에서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대학 주변의 대학촌 형성을 지방대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과 정보의 센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함으로써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이 민간업자를 유치하여 대학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촌 개발에는 민간업자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지역발전과 연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도 고려한다. 학교주변에 주택단지와 상업시설을 형성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숙소가 없어 장거리에 통학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불법건물에서 숙식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학생들의 편의시설,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풍기문란과 정서불안이 더 이상 없도록 물리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Ⅶ. 맺음말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 지방대학이 많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등 기라성 같은 대학들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국가는 학문의 수월성과 국가발전을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준다.

지방에 묻혀 있는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현실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일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며, 또한 지방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지방대학의 연구 및 대학원 기능이 약해지면 학부교육이 부실해지고, 지방의 대학이 위축되면 지방이 붕괴하며, 지방이 와해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교육계를 포함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James C. Hearn, "Transforming U.S. Higher Educatio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Innovative Higher Education』, Vol.21, No.2, Winter 1996.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1999. 3.

김희복, "지방대학의 특성화" - 경성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육』 Vol. 103,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2000, 1-2월호, 62-67.

김효겸,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대학교육』 Vol.9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3-4월호, 88-95.

노순규, "지방화시대 기업 역할", 『한국기업경영연구원』, 1997.9.10.

● 토 론 I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

박 재 목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장)

I. 지방대학 위기의 현실

지방대학이 맞고 있는 문제의 유형과 그 심각성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대학에 따라 다르다. 문제의 유형은 '정원 미충원', '우수학생 유출' 및 '기능 저하'로 구분할 수 있다.

'정원 미충원'의 문제는 주로 지방의 후발 대학들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김성국 교수의 발표 논문의 <표 1>에 따르면, '정원 미충원'은 지방대학 중에서도 전남(미충원율 16.26%), 제주(미충원율 11.00%) 및 전북(미충원율 7.78%) 지역 소재 대학들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원 미충원'은 해당 대학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학생 유출'은 지방대학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 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비교적 전통있는 대학들이 중시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들 대학 중 일부가 일부 분야에서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

어도 그 규모가 극히 경미하여 이로 인한 대학 운영상의 문제를 겪지 않는 반면에, 과거에 비하여 우수 학생이 다수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가까운 대학일수록 우수 학생의 지역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는다.

'기능 저하'의 문제 역시 지방대학 일반의 문제이지만,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전통있는 대학들이 중시하는 문제이다. 지방대학의 기능 저하는 특히 대학원 교육, 연구 및 취업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작년에 시행된 BK21사업 중 대학원육성사업의 시행으로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대학원육성사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과 포항공대 및 과학기술원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은 반면에, 일반 지방대학들의 대부분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방대학들이 우수 대학원생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연구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BK21사업 중 대학원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분야의 총 26개 과제 중 포항공대와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일반 지방대학이 주관대학이 되어 선정된 과제는 1개 과제(경상대학교)밖에 없으며, 인문사회분야 총 18개 과제 중 지방대학이 주관하여 선정된 과제는 2과제(대구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II. 지방대학 육성 방안

1. 대전제

1)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기능분담론'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BK21사업의 수행과 맞물려 지방대학은 '학사과정교육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우수 대학은 '대학원중심대학' 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육

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분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분담론'은 단순히 대학간 기능 조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간 서열 체제를 고착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신장되는 가운데 이 중 적어도 몇 개의 지방대학이 '대학원중심대학' 또는 '연구중심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대학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기능분담과는 달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능 분담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에 비취볼 때, 사립대학이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순수학문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을 국립대학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에 두어야 한다. 대학의 산출을 졸업생 배출과 연구 성과로 집약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산출이 경쟁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 투입을 증대시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내부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대학 육성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우수한 졸업생 배출을 위한 투입이 없이 단순히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특혜적 조치를 요구하는 일은 자칫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열등 낙인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관련 기관의 저항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3)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방대학이 맞고 있는 위기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불

균등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권력, 경제력 및 사회·문화적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수 교수와 우수 학생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앞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대중요법적 또는 단기적 사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 구체적인 방안

1)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제 자원 특히 사회·문화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우수 학생 자원을 지방대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자원의 상대적 결핍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으로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 특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 여건 개선 목표에는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규모와 교원(조교 포함)의 정원 등은 물론 정보화와 강의실의 멀티미디어화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규모와 우선 순위는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직접 지원과 함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성화 유도

지방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특성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백화점식 경

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특성화 분야 결정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학 스스로가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적 조건과 내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 육성 분야를 결정하고 이 분야에 내부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대학의 특성화 사업은 대부분 대학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집중지원사업에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특성화 분야 결정이 대학의 내발적 발전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자원의 유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내부의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 대학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오는 특성화 자금 유치에 급급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에서 많은 대학들이 정보통신분야에 지원하게 된 것은 경쟁적 상황에서 이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성화 분야 결정의 외부자원의존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대학은 명확한 발전 목표를 가져야 하고, 특성화 분야 결정을 위한 자체 학과(학부)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 사업의 지원기간을 보다 장기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한다.

3) 대학간 협력체제의 구축

지역대학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지방대학 발전에 필요하다.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대신에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협력체제가 바람직한가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지역별로 가동되고 있는 지역별 총장협의회 또는 보직자협의회 등에서 볼 수 있는 ‘협의체’는 실효성 있는 대학간 협력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 수준에서는 학점 교류 등은 가능하나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등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는 최소한 몇 개의 지역대학들이 교육과정 일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준의 ‘협력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 수준의 협력체제에는 국·사립 구분없이 지역대학 일반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립 주체가 같은 지역 소재 국립대학들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California University System)과 같은 ‘강한 결속력’을 갖는 연합대학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합대학의 추진은 다소 느슨한 결속력을 갖는 ‘협력체’의 수준을 거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합대학을 구성할 경우에도, 지역별로 ‘연합이사회’를 두되 개별 대학이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통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Ⅱ ●

지방대 육성과 특성화 노력

오 을 임

(조선대학교 교수)

정부가 우수 인재의 서울 편중 현상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 편중의 원인과 이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하여는 기초발제와 주제발표문에 잘 진단되어 있으니 본 토론자는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주최측의 ‘각 대학 및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화 노력을 중심으로 토론 원고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소속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소개하고, 교육부가 예시한 개선 대안에 대하여 우려되는 바를 지적하고자 한다.

I. 교육의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가

1.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自我實現이다.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제각기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이 인생을 승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모두가 서열화 되어 일류대학에 진학한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극심한 점수 경쟁은 비인간화를 촉진하고 언제나 실패자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2. 대학교육의 기능은 현실의 추종인가?

대학교육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이고,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수하는 일이고,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을 가진 인격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서류에 영합하여 현실적인 쓸모만 강조하고 세칭 비인기분야는 인류의 본연 또는 먼 미래로 볼 때 필요함에도 고사되어 가고 있고, 학습이 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II. 조선대학교의 특성화 노력

- ① 조선대학교는 ‘부강한 국가건설을 위한 민족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이념으로 하여 1946년 설립 당시부터 ‘개성 교육체계의 확립, 교장과 사회현장과의 연결 구현하는 생산교육의 실시, 학자의 유빈으로 영재의 휘몰을 좌우케하지 않는다’는 3대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다.
- ②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연계전공제도, 학생 디자인 전공제도, 산학협력의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프로그램만 소개하고자 한다.

1. 산학연계 특별전공 프로그램(IRP 21: Industrial Relationship Program 21)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현장과 연계된 실용적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취업률도 제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① 사업추진 방법

- 각 분야 별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 학기초에 2-3학년생 가운데 50명씩의 대상자를 선발한다.

- 각 분야 별로 책임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사를 위촉하되, 특히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산업현장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한다.
- 각 과정별로 외부 겸임교수가 70%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현재 첫 학기에는 모든 강의를 외부 겸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 교육과정은 실습과 현장교육 위주로 운용하되, 학기 중 실습이 어려우면 방학중 실습으로 하거나 계절학기에 개설한다.
- 궁극적으로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와 연계하여 사회(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② 현재 진행중인 특별전공 분야

1. Cyber무역과정
2. 창업과정
3. Web Master과정
4. 레이저응용공학과정
5. 스포츠경영과정
6. 여성지도자과정
7. 전문비서과정
8. 영상디자인과정
9. 문화예술경영과정
10. 자동화기술과정
11. 세계지역전문가과정
12. 출판미디어 과정

2. IDEA-21(119교육개혁 프로그램)

IDEA21은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운영 및 경영체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변모하고자 6개 분야로 나누어 시급하고도 긴요한 119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실천적 교육개혁 프로그램. IDEA21은 “21세기 교육과제 해결을 통한 꿈과 혁신의 실현(Innovation and Dream by Educational Assignment)”을 의미함

119 교육프로그램 분야

- 질 높은 연구력 함양(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17과제
-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교육프로그램 및 환경 혁신) 14과제
- 풍성한 학생지원 프로그램(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14과제
- 디지털로 달리는 교육 및 행정(교육 및 행정의 정보화) 15과제
- 한 차원 더 높은 행정(행정의 전문화, 효율화, 분권화) 33과제
- 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시설 설비의 현대화 및 관리의 효율화) 26과제

Ⅲ. 교육부의 주요추진 검토과제에 대한 의견

1. 학생의 불만 사항과 학교의 선택은 별개다.

등록금 감면,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우선 지원, 기숙사 대폭 확충, 해외 연수 기회확대, 복지 시설 확충 등은 결여시 학생의 불만 사항은 되지만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한 우수학생 유인 체제가 되지 못한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장학금제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교육부의 지원은 국립대 위주로 되고 있다.

국립대는 사립대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사립대가 하고자 하는 것에 경쟁을 시키는가? 이번 지방 대학 육성대책도 지방 국립대 위주로 하여 지방 사립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토 론 Ⅲ ●

지방대학의 문제점과 육성 방안

최 순 돈

(영남대학교 기획처장)

I. 지방대학의 현황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수는 현재 184개에 이르며 이중 약 62%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재학생 수의 비율도 이와 비슷한 60.3%를 점하고 있다. 이 중 국공립 일반대학이 22개나 되어 그나마 지방교육의 내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년제 일반 대학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1998년도에 총 116개 대학 중(서울 소재 대학 제외) 인천/경기권이 26개, 대전/충남권이 18개로 권역 별로 고려하더라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대학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충남권은 인구에 있어 대구/경북권이나 부산권, 울산/경남권보다 훨씬 적지만 그 대학 수는 고려된 권역 중 가장 많다. 이는 인구가 적은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가까울수록 대학 수가 많음을 뜻한다.

II. 지방대학의 문제점

1. 지방대학은 서열에 있어 하류로 가고 있다.

현행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는 지방대학의 하류화를 가속화시켰다.

수능시험 성적이 공개되며 수도권외의 인구집중과 연계되어 수도권의 대학은 일류화로 되어 갔으며 지방 명문대는 그 명성을 쇠퇴하고 있다. 예로서 지방 사립대학에서 고시에 합격률은 아주 저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서열은 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학,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다.

2. 지방대학 중 특히 사립대학은 재정이 열악하다.

사립대학은 학교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으로부터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률은 69%에 이르고 있다. 과거 사립대학교의 소유주가 부의 축적 수단으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사립재단이 수익사업 이익 중 83.0%를 전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재정의 법인 진출금의 기여도는 불과 6.0%에 불과하다.

3. 지방대학의 현실적인 위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 있다.

진학 학생수의 감소는 특히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하였다. 특히 학생의 등록금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사립대학으로서는 대학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이다. 1999년도 184개 대학 중 약 1만 명 정도를 충원하지 못하였으며, 미충원률은 수도권이 불과 0.6%인 반면 지방대학은 약 4%에 이른다. 이들 미충원률은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도 입시에서 광주/전남권에서만 약 1만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주요 통계 예측 연구에 의한 고등학교 설문에서 조사 고등학생들의 수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 소재의 학생들이 2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울 진학 희망이 73.2%나 되었다.

4. 지방대학에는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수능 상위 5%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무려 62.5%에 이른다. 지방대학에서는 의과대학 등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야에 국한하여 수능 우수학생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 중 대전 대덕에 처음으로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하였지만 막상 대기업은 자체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연구소는 인재 확보를 위해 서울에 설립하는 추세에 있다.

5. 대기업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다.

삼성전자, SK, 대우 상사 등을 예를 들어보면 지방대 출신 비율이 불과 20% 이내이다. 그나마 그것도 대기업 계열 중 지방 소재 공장이나 지사가 있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Ⅲ. 지방대학의 육성책

지방대학의 현재 맞고 있는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한 서울의 교통 문제, 공해문제, 국민의 무조건적인 서울 선호 경향, 지방 비하 인식, 지역간 불균형에 의한 갈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책은 ① 정부의 정책, ② 지방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③ 기업의 인식 전환, ④ 지방대학의 자성적인 노력 등이 상호 부합되어야 진정으로 지방대학이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며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고루 육성하는 조건과 지방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조건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보겠다.

1.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지방대학에 직접적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정책”과 국가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국토 개발 정책”이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정책은 지방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재정적인 보조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지원 및 정책이다. 이것들은 (1)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2) 국가 인재 선발에 있어 지역 우선권 부여, (3)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한 권역별 대학간 연계 체제 가동 및 공동 운영방안 마련, (4) 지방 사립대학의 세제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국토개발 정책은 반드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나도 인위적인 정책은 곤란하다. 1994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었고 1994년 지역균형 개발 법이 있었으나 아무 것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고용 기회가 확대되며 직장도 첨단, 양질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고, 좋은 상류 대학이 많으며, 대부분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며, 정부 기관이 집중되어 국가와의 업무 도움이나 프로젝터를 수행하는데 큰 장점이 있고, 각종 문화 활동이 서울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 중 몇 가지만 지방의 어느 지역이 만족되더라도 그 지역의 대학은 육성될 것임에 분명하다. 예로 대기업 소유 대학이나 국가가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지방 대학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지방 대학 육성 방안으로 지역의 산업적·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그 대학의 분야를 특성화하는 정책이다.

2.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지방자치 단체는 그 지방에 소재 하는 지방대학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 도시, 첨단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미국과 같은 “대학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거의 전부 대학 도시이다. 앞으로 고등학생 지원자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일반인의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행사를 지방자치 단체와 협조 하에 운영함도 바람직하다.

3. 기업의 인식 전환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기업이 지방 대학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면 유능한 인재가 지방 대학에 올 것이고 지방 대학의 교육 수준도 올라 갈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방 대학이나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대 특성화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재정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예로 지방에 공장을 건립시 세제 혜택을 주고,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 인프라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구축하며 국가 공단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4. 지방 대학의 자성적 노력

지금까지 지방 대학이나 지방의 지역주민들은 정부에 맹목적인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 요구해 왔다.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맹목적인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자성적인 노력으로는 특성화를 위한 대학 스스로 자발적 구조조정, 폐쇄적인 사고력 전환과 학교의 투명한 학사 운영, 구성원의 개혁의지, 도덕적인 재단 구성, 양적 팽창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방식 채택 등이다.

● 토 론 IV ●

지방대 육성방안

업 상 현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교육부는 지난 3월 2일 국가 인적자원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 우수인재들이 고교 때까지의 생활 근거지를 떠나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이후 생활의 근거지를 수도권 중심으로 마련해 가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신설 대학의 수와 학생입학정원의 증대 및 대학입학지원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지방대학이 겪기 시작하고 있는 학생자원의 양적 질적 감소현상을 극복하여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교육여건개선’,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축’, ‘산·학·관 교육공동체 구축’, ‘우수학생 유인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등 크게 5개 영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계획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을 포함하는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석경북대총장)를 구성하여 운영(3.22 제1차 회의)하고 있으며, 보다 추진력 있는 실천방안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 및 관계 분야 전문가들로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수립은 기본적인

로 지방대학을 포함하는 지역의 기관·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4월3일 제2차 실무추진반 회의시 우선 전국 지방대학의 지역별 기획연구실장 협의회장들을 초청하여 동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편의상 기존의 지방대 기획연구실장 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6개 지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으로 구분하여 권역별협의회 구성안을 구상하여 실무추진반과 협의하고, 각 지역 내에서의 세부적인 지역 구분 및 협의 방식·일정 등은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지역별 협의회 지역내 행정기관, 기업, 언론사, 지역내 유력 시민단체 등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기관과 단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다 실천력 있는 방안들이 논의·제안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수립되어 추진시도된 각종 형태의 지역발전 방안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되지 못한 이유로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교육, 행정, 산업 등 영역별 지방 육성 방안의 종합적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지역내 관련기관들이 스스로 자체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방과 중앙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 역할 수행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 동시에 중앙에 대하여는 중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일정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서부터 다양한 지방대학 발전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5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실무추진반은 지역별 순환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순환협의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무추진반과 위원회에서 지방

대학 육성대책 시안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추후 각 지역협의회에서 최종적인 지역별 방안을 선택하여 제안하면, 실무추진반은 이를 위원회가 준비한 시안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시안을 7월말경 준비할 것이다. 이 시안을 2~3 차례의 전국 규모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교육부에서 수립되어 지방대학을 통하여 추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향후 논의되고 수립될 지방대 육성방안에 포함될 과제들이 단순히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교육부문의 정책수단에 한정되거나, 지역의 책임이 제외된 중앙정부만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입장에 기초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제안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사자인 지방대학들이 이 과정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제안을 해 주신 주제발표자 분들을 포함하여 지방대 육성방안을 강구하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적 기능에 의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교육부가 대학설립이나 정원 등을 통제해온 것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단순히 모든 지방대학에 학생을 모아주자는 것이 아니며, 대학경영자와 교수를 포함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지방대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관심을 교육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교육이외의 다른 정부정책과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으로 관계부처들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다음과 같은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기업·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금융의 활성화
- ②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교육의 특성화
- ③ 지역정보화 촉진
- ④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
- ⑤

문화여건 개선과 관광부문 육성 ⑥ 지방 재정·행정체도의 개선 ⑦ 지역균형 발전 종합추진체제 개선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지방대 발전은 교육정책에만 의존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취지로 산·학·연 협동에 대하여 논의하실 때 ‘산(산업)’의 의미를 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전통 등을 포함하는 사회 각 부문의 활동을 모두 포괄토록 하여 대학이 사회와 보다 폭 넓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가 주된 원인이 되는 수도권대학의 발전 모형은 최소한 “수도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방대학 발전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은 많지만 대학의 활동을 사회의 다른 분야활동의 종속변인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독립변인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